전주매일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종 합

군산지역 경제위기 전면 돌파

군산시-국회 기획재정위, 현안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등 대책 마련 노력

군산지역의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지역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실적 대책미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17일 군산시와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시청에 서 군산상공회의소, 시장상인연합회, 조선업 및 자동차 협력사 등 유관기 관 대표 등과 간단회를 가졌다.

국회 기재위 군산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어려운 군산 경제 위기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지역상공인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군산시와 현실적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춘석 기재위원 장과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및 기재부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해 고용위기지 역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고, 군산시 참석자 건의사항을 검토하면 서 정부 지원 입장에 대해서 실무적 인 답변도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현안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활성화 ▲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추가 지원 ▲전북 군산형일자리 모델 추진 ▲경 제위기지역자립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 중고차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

진 등이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 경기 가 호전되고 현대중공업 수주실적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군산조선 소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수



17일 군산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시청에서 군산상공회의소, 시장상인연합회, 조선업 및 자동차 협력사 등 유관기관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 물량 배정 등을 위한 정부와 정치 권의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군산사랑 상품권 시행 이후 지역상권이 회복되 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정부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긴답회에 참석한 기획재정위원 회 의원들은 군산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붕괴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연관 산업 동반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현장 의 목소리를 듣고, 군산을 비롯한 고 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현성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군산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으로 위기 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정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을 위해 기재위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업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현대중공업 수주물량의 군산 조선소 배정과 군산형일자리 모델 추 진,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등 현실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 /군산=김정훈기자

與, 회의 30% 무단 결석시 국회의원 제명안 상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결석한 국회의원에 대명까지

검토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 불이익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활동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당 삭감부터 의원직 정지에 이어 제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관계지는 뉴시스와 통회에서

"회의 불출석의 10%, 20%, 3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세비 삭감과 출석정지 제도를 논의했다"면서 "10%이상 불출석하면 30일 출석정지, 20%이상은 60일, 30%이상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되도록 하는게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회 무단결석시 세비 20%삭감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다"면서도 "결석을 많이 하면 세비와 정치자금법도 삭감하는 등 징계를 강 화하는 방안으로 국회 개정안 마련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의견 수 럼을 더 한 뒤 11월 초에 확정안을 발 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골자로 한 법안이 처리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 다. 정당을 떠나 의원 모두에게 부담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특위 관계자는 "지금 국회 신뢰 도가 워낙 낮아서 국회가 일정정도의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안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윤후덕 의원 "고용위기지역 군산에 강력한 지원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주당 윤후덕(경기도 파주시갑) 의원은 17일 한국은행과 국세청 호남·충청지 역 국정감사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 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은 지난해 4월 5일부터 1년간 고 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경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올해 4월 1 년간 연장됐다.

윤 의원은 이날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군산지역 경제는 지난 2 년간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자 수가 2017년 2000 명, 지난해에도 3000명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2016년 1.5%에서 지난해 3.6%로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GM 생산공장은 지난 6월 28일 (취명신에 인수돼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올해들어 새만금 개발사

업 본격 추진, 태양광 설치시업 등으로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소폭 개선되고 있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취업자수가 3000명 증가했고, 주택가격 하락폭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 대용지에 대한 투자기업이 증가하면 서 군산지역 경제심리도 소폭 개선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위축됐던 군산의 경제 지표 개선 여지가 보인다"면서 "지역 스스로 미련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감사원 "선관위, 한국선거방송 운영 재검토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 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한 TV 채널 한국선거방송'을 개설하기 위해 국 가재정법을 위반, 약 17억원의 예산을 전용・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채널 개설을 위해 '공직선거관리' 예산 중 14억7000여만원을 전용하고 '선거관리 행정지원' 예산 중 2억2000

여만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사원은 선관위가 국가재정법을 위 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예산이 정한 목적과 달리 경 비를 사용할 수 없고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전용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지상파 TV 등 방송매체 홍보에 매년 30억~40억원을 들이고 있고 유튜브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도 홍보 효과가 미흡한 채널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국선거방송 채널은 2개의 유 선 방송에만 개설돼 있어 해당 방송 가입자만 시청할 수 있어 시청률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이·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선거방송 채널 운영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뉴시스

전북 상반기 청년 고용률 32.8% 그쳐

유성엽 의원 "경제 선순환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절실" 강조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은 32.8%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은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과 국세청 호남·충청지역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도 전북 (32.8%), 전남(35%), 광주(38.9%) 순으로 낮으며, 이는 전국 평균 43.1%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호남은 죽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이들의 경제 활동 참 가율 역시 44.2%, 39.9%, 36.4%로 전 국 평균 47%보다 10% 가까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서면했다.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 다보니 자꾸 호남을 떠나고 그러면 고령화가 빨라지고, 다시 일할 사람이 없으니 기업들은 안온다"면서 "이대 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호남은 고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호남지역 전체를 경제 위기 지역으로 선포해 각종 세금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 선순환을 위한 국 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 중 하나로 새만금 지구 를 세금, 규제, 땅값, 노조 없는 4무 (無) 경제구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 다. 이를 통해 부품 소재 중소기업 1000개를 유치, 전북 경제를 살리자고 주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국정감사 질의 응답하는 최효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장 최효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이 17일 한국은행 전북본 부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

시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